

부처별 주제보고

외교부



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기반한 국익 극대화 외교

주변 4국 외교

- ◆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
- ◆ 실질협력 증진

외교 다변화

- ◆ 외교지평 확대
- ◆ 신남방/신북방정책

외교부 혁신

- ◆ 외교역량 강화
- ◆ 공정/균형/개방 인사



주변 4국 외교



외교부



➡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소통 · 공조 강화



주변4국 외교



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동맹 강화

- » 정상 간 긴밀한 관계 → 한미 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
- » 정책 및 대외메시지 조율 강화 : 고위급 협의, 적극적 공공외교 전개
- » 대북정책 공조, 방위비 분담 · 한미FTA의 호혜적 해결 도모



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 본격화

- » 국민방중으로 마련된 교류 · 협력 가속화
 -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/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증진 / 인적·인문 교류 확대·강화
- »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민감 사안의 세심한 관리



주변4국 외교



외교부

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

- » **역사 문제와 실질협력 분리 대처**
 -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실질협력 추진 노력
 -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 해결 추진
- » **평창올림픽, 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양국 관계 격상 계기로 활용**



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

- » **정상 방러 추진 등 고위인사 교류 확대**
- » **한-러 실질협력 및 對러시아 공공외교 강화**
 - 『9개 다리』 협력 추진, 한-러 지방협력포럼 발족, 의회·민간교류 가속화
 -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



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

» 『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』 구축 추진

- 우리 주도의 역내다자협의 지속 추진
- 우리의 안보 및 번영에 우호적인 역내 평화협력 환경 조성

» 한일중 3국협력체제 발전 노력

- 한일중 3국 정상회의 발전에 적극적 기여
- 역내 전략적 안정 및 3국간 실질협력 진전 도모

» 다양한 역내 다자협력 추진



글로벌 외교환경 변화와 도전

- » 중견국으로서 역할과 위상 강화 필요성
- » 우리의 지속적 번영을 위한 외교 공간 확대

협력 대상 · 의제 · 행위자 다변화

- »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역·국제기구와의 심층적 협력 관계 구축
- » 개발협력, 평화유지 등 글로벌 사안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강화
- » 정부, 민간, 기업, 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하는 외교 수행



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한 총체적 국익 실현



중견국 위상에
걸맞는 외교지평 확대

» 신남방정책

- 한·아세안 미래공동체 실현 / 對인도 협력 비전 제시

» 신북방정책

- 유라시아 지역 핵심파트너 대상 외교 강화

» 유럽, 중남미, 이중동 등 지역과 실질협력 확대

- 산업, 인프라, 방산 등 유망산업 협력 강화

»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역할 증대

- UN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평화·안보 증진
-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·인도적 지원 확대



외교부 공감의 혁신



공정 · 균형 · 개방 인사

- 외시 · 연공서열과 무관한 공정인사
- 여성, 소수직렬에 대한 균형인사
-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영입
- 대외개방 · 교류확대

깨끗한 조직 구현

- 재외공관 감찰기능 강화
 - 감찰담당관실 신설
 - 비위예방 및 초동단계 해결
-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

외교역량
강화를 위한
공감의 혁신

업무 효율성 제고

- IT기반 업무환경 효율화
 - 문서Cloud, 지식iN, 블로그 등
- 과도한 문서 작성 관행 개선
- 본부 ↔ 재외공관간 영상회의 적극 활용

일 · 가정 양립

- 초과근무 감축지속(17년 16.7%감축)
- 유연근무 및 연가사용 활성화
-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병행
 - 다양한 형식의 소통의 장 활용

신뢰받는 유능하고 깨끗한 외교부

통일부



통일국민협약

- 국민 참여와 쌍방향 소통
-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

생활밀착형 정착지원

- 탈북민 삶의 질 제고
-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

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

- 이행여건 조성 추진
-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준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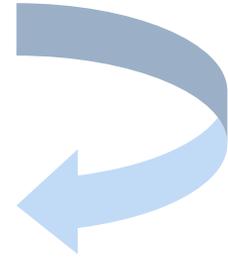
국민적 공감대 확대, 지속 가능한 대북 · 통일정책 추진



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 조성

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협약 체결

남남갈등 해소, 대북·통일정책의 지속성 확보



국 민

국 회

시민단체

정 부



통일국민협약

- 주요 이슈 공론화
- 상시 쌍방향 소통
- 국민적 합의 도출

'차이점'이 아닌 '공통점'을 찾아 합의를 키워가는 방식





통일국민협약 추진기반 조성

국민관심 제고 및 사회적 대화체계 마련

국민 캠페인

- 시민사회와 협조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

쌍방향 국민소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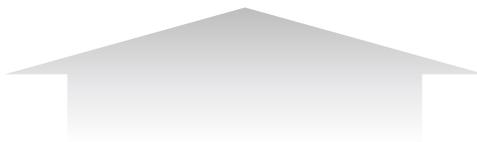
- 국민 포럼 「통일을 위한 사회적 약속」 구성 · 활동
- 국민 의견수렴 추진, 「광화문 1번가」 방식 참고

공론조사

- (상반기) 대북정책 맞춤형 조사모델 개발 및 시범 실시
- (하반기~2020년 목표) 공론조사 본격 실시



생활밀착형 지원으로 탈북민의 삶이 나아지는 따뜻한 사회 구현



삶의 질을 높여주는 탈북민 정책

- 취업지원 체계 재구축
- 청소년 교육의 질 제고
- 민원 서비스 편의 개선

온 사회가 함께 하는 탈북민 정책

- 민간·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강화
- 하나센터 운영기반 확충

따뜻한 이웃이 되는 탈북민 정책

- 취약·부적응 탈북민 보호 강화
- 우리 사회의 포용력 확대



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 발표 (2월)

-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확정, 탈북민 · 현장전문가 등 대상 설명회 개최



「탈북민 정착지원 기본계획(2018~2020)」 반영

- (2018년) △ 직업훈련 확대 △ 민원 편의 제고 △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
- (2019년) △ 취업지원 체계 재구축 △ 예비대학과정 신설 등
- (2020년) △ 하나센터 시설화 및 표준화 △ 대안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



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체화

비전

한반도 경제통일
동북아 평화와 번영

목표

북한변화, 경제통일 기반 조성
우리 경제 신성장동력 확보
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

원칙

국민적 합의에 기반
포괄적 호혜주의 견지
남북합의 및 국제규범 준수





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여건 조성

- 기존 남북합의, 변화된 환경 등을 반영, 종합계획(안) 수립 (상반기)
- 대북제재 틀 내에서, 우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을 통해 협력환경 조성

북한 참여 유도를 위한 협력사업 준비

- 남북대화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에 「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」 설명
- 국제학술행사 및 민간교류를 통해 대북 메시지 지속 발신

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북한 호응 유도

- 중국 일대일로 및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전략적 협력방안 추진
- 북한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

국방부



『국방개혁 2.0』



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'강한 군대' 건설

● 국방개혁 3대 목표

- 싸우면 이기는 군대 육성
-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
- 국민이 신뢰하는 軍으로 체질 개선

● 추진 전략

- 국방개혁을 위한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범정부 협조체계 유지
- 국방개혁 추진 기반 (법령, 예산) 제도화를 통한 실행력 제고 (국방개혁 특별법 정비)
-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지 확보

『국방개혁 2.0』의 성공적 추진, 문재인 정부의 책임국방 구현



북한의 도발억제,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수행개념

- (배 경) 북핵·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'강력한 3축체계'에 기반한 억제 및 대응 능력 확보와 공세적 작전개념 정립 요구
- (핵심 내용)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공격, 我 영토에 대한 핵·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적 도발시, '최단시간 내 최소희생'으로 전승 달성
 - * 주요 표적을 신속히 제압, '공세적 중심기동전투'로 조기에 전환
- (기대효과) 확장된 3축체계 역량으로 북핵·미사일 위협에 대한 거부적·응징적 억제 구현

북핵 및 미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주도적·공세적 개념 발전



정보·기술집약형의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軍구조로 전환

- **新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**
 -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체제 확립
 - 신속·결정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기동부대 (공정·기동·상륙 부대) 신편
- **개념과 소요에 기반한 전력구조 개편**
 - 북핵 대응 및 新작전수행 소요전력 확보
 - 부대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및 현존전력 보강
- **병역자원 및 부대구조를 고려한 병력구조 개편**
 - '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 (육군 위주 감축, 해·공군 현 수준 유지)
 -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개편 (현역은 야전으로 전환)

新작전수행개념에 기반하여 싸우면 이기는 軍 구조로 개편



방위사업 비리 근절대책 우선 수립, 인력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 증진

●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(비리 근절)

- 軍·産 유착 근절 및 비리예방 대책 고도화 (방산브로커·퇴직공직자 제도적 관리 강화 등)
-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·벌의 균형 (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, 인센티브 부여 등)

● 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

- 기술·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(중소·벤처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걸림돌 제거 등)
-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(방산 수출 품목 및 방식 다양화 등)

●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및 국방 R&D 역량 강화

-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
- 국가 R&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 (미래도전 기술개발 제도 신설 및 기반 조성 등)

책임국방의 주춧돌로서 방위사업 체계의 전향적 개선 추진



국방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국방운영의 효율성 극대화

● 문민통제 확립 및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

- 국방부 문민화 및 軍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·의식 개선
- 단계적 병 복무기간 단축 (육군 기준 18개월) 및 여군 비중 확대 (~ '22년 8.8%)
- 장군 정원 축소 조정,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인력운영 여건 보장

●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친화적 국방운영 강화

- 예비전력 정예화 (적정규모의 예비군 편성,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등)
- 첨단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군사력 운용 능력 확보 (지능정보기술 국방적용 강화 등)
- 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국방운영 ('국민과 함께하는 軍 만들기' 프로젝트 추진 등)
-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(軍 점유 사유재산의 합리적 보상 등)

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軍으로 체질 개선



장병 인권보호 강화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

● 장병 인권보호 강화

- 軍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
- 軍 사법제도 개혁, 장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
- 軍 인권보호관 신설 (국가인권위 산하), 영창 폐지 및 인권친화적 군기교육제도 마련

●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

-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국방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추진
- 군내 불합리한 관행·부조리 척결로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
- 장병이 체감할 수 있도록 軍 의료 서비스질을 민간병원 수준으로 개선 (민군 협진 강화)

선진 병영문화 정착으로 '가고 싶고, 보내고 싶은 군대' 육성



향 후 추 진



- 『국방개혁 2.0』 초안 검증 및 조정, 기본계획 완성 : '18. 2~4월
 - 전문가 의견 수렴, 타 정부부처 협조, 공청회·토론회 : 2월 이후 계속
 - 『국방개혁 2.0』 기본계획 완성본 보고 및 배포 : '18. 4월
- 『국방개혁 2.0』 기본계획 완성에 따른 후속 조치
 - 중기계획 반영 및 '19년 예산 편성 : '18. 4~6월
 - 법령 개정 소요 판단 및 개정 절차 이행 : '18. 4~12월
- 『국방개혁 2.0』 홍보 및 소통 추진
 - 문재인 정부의 '책임국방'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기획·홍보
 - 對국민 소통 창구 개설,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개혁으로 추동력 강화
 - 청와대, 유관부처·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홍보 추진

국가보훈처

2017년

성과

- 국가보훈의 **정상화**(正常化)
* 정치편향 안보교육 개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
- 혁신과 도약을 위한 **기반 마련**
* 장관급 격상, 보훈예산 5조원 돌파(11% ↑)



2018년

정책방향

- 보훈가족의 삶에 스며드는 **따뜻한 보훈**
- 보훈발전계획 수립, 보훈단체 개혁 등 **혁신 제도화**
- 3·1운동 및 임정수립 기념사업, **새로운 100년 준비**

▶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복지 강화

사각지대 해 소

- (발굴) 독거세대 등 선제 발굴·지원 「**보훈나눔+**」 사업 도입
* 실태조사·발굴 → 복지기관 협업 → 나눔서비스 제공
- (방문) **찾아가는 보훈서비스** 확대(독립유공자 손자녀, 보훈보상대상자)
- (협업) **기초수급 보훈가족** 적극 찾아 수당 지급(복지부 협조)

맞춤형 서비스

- (독립후손) 독립유공자 (손)자녀 **생활지원금** 신설(526억원)
- (순직유족) 가족을 잃은 유족 **심리상담서비스** 도입
* 심리재활집중센터 설치, 보훈관서 심리상담사 신규 배치
- (고령자) **보훈요양원**(722억원), **재활센터**(682억원) 건립

▶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보훈심사 개선

군 의무 복무자

- 군 복무 중 사망 · 질병의 경우, **국가책임** 강화
- 순직 · 자살자는 **직무관련성**을 폭넓게 인정
- **국민 배심원단** 구성,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

독립 유공자

- 기존 수형(受刑) 사실 위주의 **심사기준** 개선
- 소외된 **여성 · 의병** 적극 발굴 · 포상
* (여성) 전체 포상자의 2% / (의병) 참여자 중 포상자 0.8%
- **독립운동사연구소**(독립기념관)를 발굴의 중심기관으로 육성

▶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

제
대
군
인

- **(일자리) 중·장기복무자 6,400명 일자리 제공**
* 1社 1제대군인 채용 확대로 우수 일자리 발굴
- **(취약계층) 의무복무자 중 취약계층(고졸 이하) 취업지원**
*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담상담사 배치, 사이버 교육 지원

U
N
용
사

- **(재방한) 생존 참전용사의 여명 고려, 초청 확대**
* '17년 581명 → '18년 630명 → '19년 800명 → '20년 1,000명
- **(미래세대) 혈맹관계를 다음세대까지 지속**
* 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, 장학사업



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

▶ 미래 대비 중장기계획 수립

국가보훈 발전계획

- 국정과제, 보훈수요(고령화, 국민통합 등)에 대응(5개년 계획)
- 민관합동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· 확정

국립묘지 관리계획

- 고령화 대비 안장능력 확충
- 안장 사전심의 · 재심의 도입 등 심사제도 개선

현충시설 보존계획

- 「현충시설법」 제정, 국가 · 지자체 · 민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
-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 · 호국 외에 민주시설 포함



▶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

기념 행사

- **(화합) 독립-호국-민주 기념행사를 균형 있게 실시**
 * 2019년 : 3·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(100주년)
 2020년 : 6·25(70주년), 4·19(60주년), 5·18(40주년)
- **(참여)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**
 현충일 6610 묵념 캠페인, 온라인 댓글 릴레이

현충 시설

- **(체험) 사적지탐방, 독립군학교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**
- **(보존)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, 해외사적지 전수조사(~'20년)**
- **(관리) e-현충시설국민지킴이, 국민참여형 관리시스템 도입**



▶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 정립

수익사업

-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훈단체 「**재무회계규칙**」 제정
- 부적정 사업에 대한 **제재규정**(과태료, 영업정지 등) 마련

정치중립

- **기부금** 기부자 · 사용내역 공개하여 정치 개입 방지
- 중립의무 위반시 실효성 있는 **제재규정** 신설

사회공헌

- 단체별 특성을 활용한 **봉사활동**, 미담사례 발굴
- **우수사례** 포상, ‘보조금 + α ’ 를 통해 활동 유도

▶ 독립정신 계승사업 추진



기억 1,000만명 릴레이 「**독립의 햇불**」 ➔ 3·1 운동 재현
특별 「다큐멘터리」 제작 ➔ 독립의 역사와 현장 조명
「국제 학술포럼」 제작 ➔ 3.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부각

감사 일제강점기 「受刑기록」 전수조사 ➔ 독립유공자 발굴
훈장 미전수 「후손 찾기」 ➔ 묻혀진 후손 찾아 지원
헌정음악 「**위대한 유산**」 제작 ➔ 감사의 의미 공유

계승 온라인 캠페인 「**과거 100년, 미래 100년**」 ➔ 분위기 확산
「VR 콘텐츠」 제작 ➔ 미래세대에게 독립의 역사 체험
「국내외 사적지」 탐방 ➔ 독립운동의 현장 답사

▶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

! 사업 개요

- 위치 : 서울시 서대문구 의회 청사 부지
- 기간 : 2017년 9월 ~ 2020년 8월(예산 364억원)
- 규모 : 지상 5층, 지하 1층, 연면적 6,236㎡ (1,890평)



2018년 (설계)

- 건립위원회 운영(1월~)
- 대국민 공모(1월~4월)
- 건축공사 착공(12월)

2019년 (공사)

- 실시설계 완료(3월)
- 기공식(4월)
- 전시물 수집 완료(12월)

2020년 (개관)

- 전시공사 및
건축공사 완공(8월)

서대문독립공원과 연계, 미래세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

**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-현재-미래입니다.
보훈을 통해 애국이 보상받고, 정의가 보상받는
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**

공통과제 보고

평창에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

문화체육관광부

평창올림픽 성공 개최, 평화 유산 창출



◆ 전세계인이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·패럴림픽

최대 · 최다 규모

- (경기) 7경기 15종목
102세부종목
* 패럴) 6경기 6종목 80세부종목
- (규모) 95개국 5만여명
* 패럴) 45개국 2만5천여명
- (정부) 각국 정상 및 장관
다수 참여 예상
* 올림픽) 정상 34개국 46명,
장관 50개국 65명 참가신청

완벽한시설, 경기운영

- (시설) 12개 경기장 및
선수촌 등 모두 완공
* 설상 7, 빙상 5, 부대시설 5개
- (수송) 특별교통대책 추진
* KTX 경강선 개통, 국도(2) 및
지방도(16개소) 완공
- (운영) 메뉴 및 종합운영
센터(MOC) 중심 운영
- 2만여명 자원봉사자 양성
(수요대비 110% 선발)

참여와 화합

- 성화봉송 참여 (10.24 채화,
10.31 인수, 11.1~전국 축제)
* 올림픽 7,500명, 패럴 800명
- 2만여명 자원봉사자 양성
* 올림픽 1만5천여명, 패럴 6천여명
- 경기 관람 (1.10 기준, 올림픽
판매율 66.4%, 패럴 61.2%)
* 사회적 약자 입장권 할인 50%
- 후원 활성화 (1조 645억원,
목표대비 113%)



1. 문화올림픽

개·폐회식 준비

• (올림픽)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과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평창만의 겨울동화

- * 개회식 '18.2.9. 20시 / 주제 : 행동하는 평화
- 폐회식 '18.2.25. 20시 / 주제 : 새로운 물결

• (패럴림픽)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열정으로 하나 되는 화합과 공존의 축제 개최

- * 개회식 '18.3.9. 20시 / 주제 : 열정이 우리를 움직인다
- 폐회식 '18.3.18. 20시 / 주제 : 우리가 세계를 움직인다

문화 프로그램

•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인지도 제고

- * 백남준 비디오아트, 근현대 대표작품 전시 무형문화재 공연, 올림픽베뉴 거리공연, 평창겨울음악제, K-POP 등 150여개 다양한 장르 추진('16~'18.3월)

•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을 발굴, 미래가치 창출

- * 한일중 올림픽 컬처로드, DMZ월드페스타, 올림픽아리바우길, 강원국제비엔날레 등

우리 문화의 가치를 전세계가 느끼고 공감



2. 안전하고 편안한 올림픽

혹한·폭설 대비

- 방한대책 안내 및 홍보
 - 맞춤형 홍보, 헬로우평창 등
 - 방풍막, 난방기, 난방쉼터 설치
 - 우의, 담요, 핫팩, 방석, 모자 등
- 관람객 수송 승하차장 및 동선 보완
- 경기장, 도로 등 제설 강화
 - * 평년대비 장비 158%, 인력 150% 증강

보안·의료 체계

- 국가테러대책위원회(위원장: 총리) 등 범정부 총력 대응
 - * 총리실 산하 대테러안전대책본부 구축, 첨단장비로 안전 지원
- 올림픽병원(2개소) 및 경기장 내 의무실(56개소)
- AI, 구제역 방역 특별 강화
 - * 소규모 농가 예방적 수매·도태 등

장애인 접근성 제고

- 무장애 환경(Barrier free)
 - 대회시설, 숙박, 화장실, 음식점, 관광지 등에 경사로·승강기 개선
 -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 전용 수송차량 확보
- 장애인 체육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패럴림픽 계기 사회통합 제고



2. 안전하고 편안한 올림픽

숙박·식음

- 숙박시설, 음식점, 공중 화장실 개선
 - * 시설개선, 다국어 메뉴판 보급
- 서비스 개선 및 모니터링
 - * 관광종사원 인력교육, 관광경찰 파견, 실태 조사

교통

- 개최지 접근성 개선
 - * KTX 운행, 시외버스 증회, 개최지 내 셔틀, 투어버스 운영
 - ** 올림픽 전용차로, 차량 2부제
- 관광객 편의 제고
 - * 시내버스 무료운행, 운수종사자 교육
 - **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, 교통패스 판매 등

안내

- 1330 올림픽 특별 콜센터
- 오프라인 안내체계 정비
 - * 종합관광안내센터(16개소), 다국어 관광안내판(259개)
- 온라인 정보 제공
 - * 모바일 앱(투어 강원),

빈틈없고, 안전하고, 편안한 대회 준비



3. 평화올림픽

북한 참가 대비

- IOC, IPC, IF 등과 북한 참가 승인 및 지원 관련 적극 협의
 - * 대북제재 관련 사안은 UN 등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
- 선수단 등 참가 대비 세부계획 수립, 시행
 - * 고위급 대표단, 응원단, 참관단 등 분야별 대책 마련
 - * 북한 선수단 참가 종목, 단일팀 구성 등에 대해 남북 IOC 회담(1.20일/스위스)에서 논의
-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 추진
 - * 올림픽 참가에 준하여 북한 선수단 등 파견 제안

문화 행사

- 태권도 시범단 남북합동 공연(2월)
- 남북 합동 문화행사
- 북 예술단 공연



3. 평화올림픽

남북 문화교류 재개

- (문화예술) △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, △만월대 공동발굴조사, △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
 - (체육) △국내 대회 북한팀 초청, △종목별 교류 확대, △국제종합경기대회* 공동입장, 공동응원 추진
- * 2018자카르타-팔렘방아시안게임, 2019동·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

확대

- (문화교류) △문화예술, 관광, 종교 등 교류 활성화, △2030 남·북·중·일 월드컵 공동유치 추진
 - (동북아 교류) 한중일 연속 올림픽 개최 계기 올림픽 조직위 간 △지식전수 및 인력교류, △의식행사, 문화교류 강화 등
- * 평창조직위-베이징조직위 간 MOU 체결 (17.12.14)

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자리매김

통일부



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복원



평창 동계올림픽·패럴림픽 북한 참가



남북대화 정례화

-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
-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 추진

교류협력 재개

- 민간·지자체 교류협력
- 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

인도적 분야 협력

- 이산가족 · 국군포로 · 납북자 문제 등 해결
- 북한 취약계층 인도지원

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「문재인의 한반도정책」 본격 추진



1.9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사항

-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·패럴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
-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올림픽 대표단, 선수단, 응원단, 예술단, 태권도 시범단, 기자단 파견
- 남측은 북측 참가에 필요한 편의 보장
- 남북은 북측의 선발대 파견 및 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 개최

평창 동계올림픽·패럴림픽 성공 개최, 「**평화올림픽**」 구현



평창 동계올림픽·패럴림픽 북한 참가

정부합동 지원·관리 체계 구축

- 조직위, 통일부, 문체부 등 관계기관 참여, 「정부합동지원단」 구성
- △북한 선수단 참가 △남북 공동입장 △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준비

남북 공동 문화행사 개최

- △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△남북 태권도 시범단 합동공연 △북한 예술단 축하공연 등 남북 공동행사 진행

유엔 및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

- 국제사회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세심하게 관리



남북회담 정례화 및 체계화

- 고위급회담을 정례화, 남북간 현안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
- 평창올림픽 관련 실무회담, 군사당국회담 등 분야별 대화 추진

남북대화를 통한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

- 남북대화과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

남북간 합의 제도화 추진

- 남북합의 법제화, 「남북기본협정」 체결 등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정립



민간 · 지자체 교류 적극 지원

-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민간 ·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본격화
- 산림 · 종교 · 체육 · 보건의료 등 대북제재 틀 내에서 다각적 교류 확대

국제사회를 통한 교류협력 확대

- △ UNFPA 북한인구 총조사 사업 추진 △ 북한 참가 국제학술행사 지원 등
-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을 통한 「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」 여건 조성

법 · 제도 정비 등 교류협력 기반 공고화

- △ 교류촉진을 위한 「교류협력법」 개정 추진 △ 피해기업 지원 마무리 등



이산가족 · 국군포로 · 납북자 문제 등 해결

- 이산가족 상봉, 전면적 생사확인, 고향방문 및 성묘, 서신교환 등 추진
- 국군포로 · 납북자 ·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

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

- △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△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 등

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

- △영유아 ·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△보건의료 분야 지원 우선 추진
-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협력,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

외교부



I.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



» 평화로운 평창 올림픽 / 패럴림픽 홍보 및 정상외교 활성화

- » 안전하고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메시지 지속 발신
- » 주요 정상급 인사 참석 독려 및 정상외교 준비 철저
 - 20여 개국 정상급 외빈 방한 예정

» 평창 →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두보

II.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



1. 목표 및 기회/도전 요인

기회 요인

- » 北 올림픽 참여 및 남북교류 재개
→ 남북간 신뢰회복 및 한반도 긴장 완화
- » 올림픽 전후 남북대화 확대
→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추진 여건 조성

도전 요인

- » 북한, 핵무력 완성 주장 / 북핵문제 관련 대화 거부 입장 불변
- » 북한의 한·미 공조 및 대북 제재 이완 시도 가능성
- » 北 추가 도발 → 긴장 재고조 가능성

II.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



2. 평창 올림픽 계기 대화 모멘텀 활용



대화 여건 조성 → 남북/북미대화 국면 진입

II.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



3.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



- » 남북간 신뢰형성
- » 북미간 예비적 대화
북핵 해결 관련 조치 협의
- » 북미관계 개선 논의 등

남·북·미/남·북·미·중 등으로 확대, 본격 대화 추진

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구축 진전

국방부



완벽한 대테러·경비지원작전 수행

● 경비지원사령관 (1군 사령관) 책임 下 가용전력을 통합한 경비작전 수행

- 2개 분구 (평창, 강릉) 분권화 작전수행, 대테러작전부대 통합 운용
* 국가 대테러특공대 (707대대)·대화생방테러특공대 (24화생방대대) 현지 운용
- 민·관·군·경 통합방위작전태세 유지

● 軍 가용전력 적극 지원,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

- 육상 : 경기장·시설외곽에 수색정찰·매복·선점부대 운영, 경강선 확보
- 해상 : 강릉 해역 3선 개념 (1선 해경, 2·3선 해군 책임) 적용 초계경비작전 수행
- 공중 : 韓·美 연합자산 운용 공중 감시 및 조기경보, 공중·지상 출동태세 유지
- 방공작전 : 방공자산 통합 운용, 드론 등 비인가 무인비행체 테러대비태세 유지

● 합참·각급부대는 상황관리팀 별도 운영 및 증원부대 즉응태세 유지

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(2/2)



軍 인원·장비·물자 지원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지원

* 인원 (올림픽 : 3,744명, 패럴림픽 : 2,251명), 장비·물자 (32종 311점)

● 특별한 올림픽 만들기

- '평화와 화해'의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 지원
- 성화 봉송 지원 (최북단 DMZ 지역 자전거 봉송, 세계 최초 군함 봉송,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등)
- 임진강 아이스하키 이벤트 (1.19.) 및 문화공연 지원 (취타대·전통의장대 등)

● 안정적인 올림픽 운영 지원

- 통역·교통관리 인력 지원 (올림픽 : 1,147명, 패럴림픽 : 714명)
- 제설 인력 (올림픽 : 20명, 패럴림픽 : 5명) 및 장비 (굴삭기 등 3종 17대) 지원
- 올림픽 CERT (사이버 침해 대응팀) 운영 (올림픽 : 4명, 패럴림픽 : 3명)

● 안전한 올림픽 진행

- 의료 인력 (의사 : 48명, 간호사 : 54명) 및 의료장비 지원 (의무후송헬기 등 3종 17대)
- 자산보호 등 안전 관리 인력 지원 (올림픽 : 800명, 패럴림픽 : 591명)

軍 본연의 임무 수행과 성공적인 "평화올림픽" 개최에 적극 기여

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(1/2)



북핵·WMD 위협 억제·대응능력 강화

●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

- 공세적 新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『한국형 3축체계 개념』 보완 (3월 恨)
- 조기·적기 구축을 위한 최우선 예산 ('19 ~ '23 국방중기계획) 반영

● 북핵·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

- 美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 방안 강구, 실질적 억제·대응 연합연습 속달
 - * 韓美 억제전략위원회 (3월, 9월), 2+2 외교국방 장관회의 (10월),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(6월)
-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(4D) 능력·태세 발전
 - * 4D 이행지침 보완, 님블타이탄 연습 참여 (3월, 5월, 9월)

● 북한 WMD 확산 방지 협력 강화

- 북한 핵·화학·생물·방사능 위협 대응능력 관련 韓·美 협력 강화
 - * 제2차 韓美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(후반기, 미국)
- '18년 PSI (WMD 확산방지구상) 훈련 참가 추진 (7월, 일본)

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(2/2)



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

- **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 협력 확대 및 국제 협력을 공동 견인**
 - *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, 한·미·일 안보협력, 다국간 연합훈련 등
- **다양한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·관리**
 - * 전작권 전환, 연합사 본부 이전, 주한미군 훈련장 관리, 미군기지 환경문제 협의 등
- **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대비**
 - * '군사적 긴장상태 완화'와 '평화적 환경 마련'에 중점을 두고 협의 준비
 - * '군사실무회담'으로 부터 '군사당국회담'까지 추진
- **'新 남방정책'과 '新 북방정책'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교류·협력 적극 추진**
 - * 국방장관 동남아 3개국 (싱가포르, 인니, 태국) 국방외교 추진 (1~2월)
 - * 한·중/한·러 국방교류협력 활성화, 한·아세안 국방차관회의 정례화 추진

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

국가보훈처

평창올림픽 성공에 기여하는 보훈

UN 참전국 협력

- **캐나다** 임진클래식 재현(1.19), 성화봉송 연계 올림픽 불 조성
 - * 임진클래식 : 625 당시 캐나다군이 임진강에서 아이스하키 경기
- **네덜란드** 정부대표단 방한 시 참전용사 초청, 올림픽 경기 참관

- **패럴림픽** 출전 국가유공자 홍보, 입장권 보훈단체 지원, 열기 지속
- **보훈가족** 강원 지역 국가유공자 올림픽 경기 관람 지원
- **보훈단체** 전국 지부 · 지회 올림픽 홍보 동참

보훈 가족·단체 참여